

FTA, 정치권 대립전선 바꾸다

한나라·민주 보수 등 盧대통령 리더십 찬사 민노·민생정치모임 비판 세력으로 바뀌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이후 정치권의 대립 전선이 '친노(親盧) 대 반노(反盧)'에서 '찬(贊) FTA 대 반(反) FTA'로 옮겨가고 있다.

앞그제까지만 해도 반노의 선봉에 서있던 인사들과 정치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고 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거나 지지 입장을 보이던 세력들을 돌리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을 독실하게 주도해 온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정치권내 세력은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주류, 중도보수 성향인 통합신당모임, 민주당내 보수성향 의원 등이며 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보수언론들도 이번 만큼은 긍정평가 일색이다.

탄핵 주역의 한명으로 반노의 선봉에 서있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3일 "한미FTA 협상 타결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소신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극찬했고, 현 정부에 독

설을 서슴지 않았던 한나라당 전역 최고위원도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측 협상대표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반면 그동안 노 대통령과 사안별로 공조해왔던 민주노동당은 가장 강력한 비판 세력이 됐다. 민주당의 주류, 우리당 탈당파인 '민생정치모임', 우리당내 진보성향 의원들, 한나라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도 반노 진영에 섰다.

'한미FTA 반대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우리당 의원 22명,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 민주당 의원 4명, 우리당 탈당파 11명, 한나라당 농촌 출신 의원 3명, 국민중심당 2명은 반FTA 혹은 반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선주자 중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한명숙 전 총리 등이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김근태 전 우리당 의장, 천정배 의원은 결사반대,



“일단 짐은 벗었다” 권오규 부총리(오른쪽)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등은 유보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수적인 분포만을 놓고 보면 한미 FTA 타결을 환영하며 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집권 이후 내내 소수였던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로 처음 다수와 쪽에 섰다.

한미 FTA는 일회성 사안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질 때까

지 계속 이어질 중대 이슈라는 점에서 현재의 대립전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노 대통령은 우군인 진보진영의 비난을 각오하고 내린 이번 한미 FTA 타결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손해를 무릅쓴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막상 타결 이후 형성된 정치권의 지형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결코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쇠고기 7~8월 수입 재개될 듯

■ 노대통령 구두 약속 언제 이행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 기준 및 국내 절차에 맞춰 성실하게 수입 재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수입 재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한국의 뼈 조각 전담검사사와 반송으로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쇠고기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요구한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 8단계 국내 절차는 밟되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7~8월이면 미국산 쇠

고기의 본격적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위생조건 개정 뒤 실제 수입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입 대상 부위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할 수 있다. 갈비의 경우 농림부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OIE가 갈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 내 수요가 많은 갈비 등까지 포함한 완전한 시장 재개방이어서 일단은 갈비까지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韓, 쇠고기 수입 안하면 미의회서 FTA 비준 거부”

조한스 미 농무장관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없는 한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조한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FTA 타결

로 미국의 식육 회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며 "한국이 FTA의 미 의회 비준을 바라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미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한 것으로 통시는 전했다.

조한스 장관은 또 한국이 내세우는 쇠고기 수입제한 근거들과 관련, "충분히 과학에 입각하지 않은 다른 나

라의 식품안전 우려에 대해서까지 융통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이끈 카란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이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협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식육협회와 농업조합연맹 등 농축산단체들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까지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 비준 과정을 밟아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공은 국회로... FTA 상임위 국지전 예고

통의통위 협상과정 철저 심의... 필요면 청문회·국조 농해수위 反FTA 대변장... 농업분야 피해보상 주력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조만간 격렬한 '국지전'에 돌입할 조짐이다. 총론적 찬반입장으로 나뉘어 전면전 양상을 보여온 주요 정파들이 소관 상임위를 무대로 협상결과를 평가하고 추후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각개전투'에 들어가려는 체배를 서두르고 있다.

◇통의통위=FTA 소관 5개 상임위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소관 부처인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주도해 온데다 정파간 이해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정치권내 FTA 논쟁의 '축소판'이 될 것이라 관측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협상결과를 대체로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가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생정치

모임의 최재천 의원 등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당장 4일 오전 열리는 통의통위 전체회의가 'FTA 미니청문회'가 될 것이라 예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원웅 통의통위원장은 "합의내용은 물론 협상과정도 철저히 심의하고 필요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미 의회가 수정요구를 주장할 경우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수정시 협정안 파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반 FTA 진영의 입장이 대변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분야가 FTA의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데다 소속의원 대다수가 농촌 출신이어서 사

실상 상임위 전체가 FTA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현실에서 한미 FTA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보상과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산자위=농해수위가 '반 FTA 상임위'라면 산자위는 '친 FTA 상임위'다. 소관 분야인 자동차와 섬유 등 수출입종이 이번 FTA의 최대 수혜분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전반적인 찬성기류 속에서 각론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섬유업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재경위=한미 FTA 협상을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재정경제부가 소관 부처라는 점에서 또다른 격전장이 될 것이라 관측이다. 한나라당과 우리당

은 우호적인 스탠스이지만 민노당 심상정, 민주당 김중인,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각론상으로는 자동차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세계개편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자동차와 특별소비세를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서비스분야도 주요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분야는 법률,회계부문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문광위=외외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물론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 투자허용, 유료콘텐츠 간접시장 투자허용, 지적재산권 개방폭 확대 등을 놓고 이해집단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FTA 협상중단 광주·전남 운동본부가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굴욕·퍼주기 FTA 원천 무효”

FTA 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공동대표 허연·이하 운동본부)는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미국

에 의한 밀실·굴욕·퍼주기 협상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국민들의 고통인 농촌은 사라질 것이며, 도시 서민의 삶은 어려워져 사회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광우병 쇠고기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한미

FTA에 위배되는 한국의 법률과 정부의 공공정책은 국제적 분쟁거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지역 내 FTA 반대 움직임에 대해 "광주·전남의 108개 사회단체가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7일 서울이나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산행안내 (Hiking Guide) section with various notices and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광주상무나이트' (Gwangju Shangmu Night) featuring a man in a hat and the text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이들은가라!!' and '태진아 4월 12, 13일'.